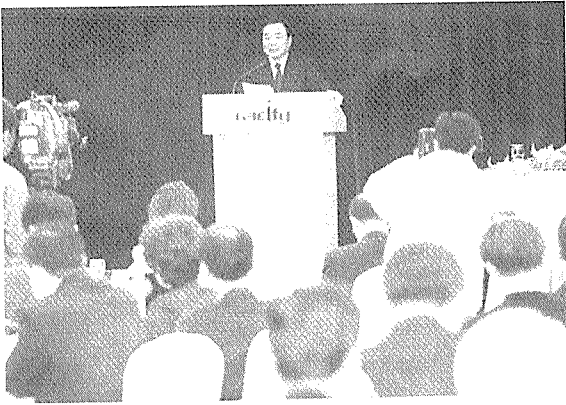


정책동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이한동 국무총리는 63빌딩에서 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소, 벤처기업 을 대상으로 한 조찬 강연에서 “오는 2005년까지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5천개를 발굴·육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해외 경쟁력을 높 이는데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우리나라가 21세기 초 경제대국으 로 성장하기 위해선 부품소재 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2010년까지 매년 50개 이상의 부품, 소재업체에 총 2조원 이상의 기

술개발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덧붙여 정부는 올해부터 생산기술연구원 등 16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기업현장에 파견 해 기술애로를 직접 해결해 주는 맞춤형 기술지원사 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정 책자금 지원을 지난해 5조 9천억원에서 올해는 6조 원으로 늘려 안정적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걱정을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 원활한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대출 처리기간을 현 45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하고, 신용대출비율을 확대해 정책자금 지 원체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작년 38조 8

천억원 규모에서 올해는 42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제품의 수요창출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다각 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

산업자원부, 해외플랜트 조사비 지원

산업자원부는 국내 기업이 해외플랜트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할 경우 건당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타당

성조사 비용의 50%까지 지원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2년도 해외플랜트개발 지원사

업 시행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는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다 프로젝트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업체들의 수주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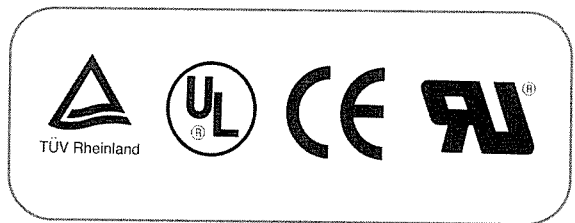
지원대상 프로젝트는 발주예산 금액 3천만달러 이상에 외화 가득률이 30%이상이어야 하며 희망업체는 3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신청하면 된다.

해외인증획득지원업체 선정, 1345개 업체 65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2002년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업체로 1천 345개 업체를 선정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올해 3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이번 1차 사업은 지원을 신청한 2천 718개의 업체중 1천 345개 업체를 선정해 65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총 41개 인증분야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으며, 특히 CE, QS9000, UL인증이 전체의 65%인 873개 업체로 나타났다. 선정된 업체들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관리기관인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업무수행 컨설팅기관 중소기업간 3자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지원금의 50%를 착수금으로 지원받고, 향후 인증획득을 완료하면 잔금 50%를 지원받게

된다. 중기청은 올해 총 1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3차에 걸쳐 2천 50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지난 2000년도에 1천 910개사에 107억원을 지원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입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이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격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해 인증획득업무를 대행케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고70%, 70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자원부, 수출 조기 회복 총력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서울 삼성동 무역클럽에서 종합상사/업종별단체, 수출지원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신국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산자부는 올해 수출 1천

620억달러(전년비 7.5%증가), 수입 1천 550억 달러(전년비 9.8%증가) 규모를 예상하고 있어 무역흑자 70~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지원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장관은 또 "올해도 수출여건이 엔화약세통상마찰 등으로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기업과 수출지원기관이 혼연일체가 돼 수출의 조기회복과 무역흑자 기

반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수출 조기회복을 위해 세계일류상품의 추가발굴을 통한 수출상품 고도화와 지역별 시장별 차별화된 시장개척지원을 강화하고, 환변동보험 확대운영 중소기업 특례보증 무역금융 보증확대 등 수출지원제도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재정, 상반기 중 53.5% 자금집행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예산 기금 공기업 투자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 53.5%에 해당하는 자금이 집행된다.

정부는 2002년 제2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위원장:기획예산처 차관 위원:각부처 기획관리실장, 공기업 부사장)를 개최하고 금년도 재정집행은 상반기에 적정 수준의 경기대응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각 부처기관의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수요자인 국민기업의 요구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경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산 기금 공기업 투자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예산의 65.4%를 배정하고 자금의 57.0%를 배정하는

등 연간계획의 53.5%를 상반기에 자금을 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지난해 마련된 재정집행 점검체계를 바탕으로 집행절차개선, 관계부처 협조 강화 등 집행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집행관행을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3조 8,135억원에 달하는 올 한해 설비투자비 중 1조 9,256억원(50.5%)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한전의 올 한해 설비투자 규모는 송변전설비 1조 7,614억원 배전설비 1조 7,446억원 정보통신설비 1,150억원 기타 토지 건물 등 업무설비와 무형자산 1,925억원 등이다.

중소기업 환차손 피해 대책 마련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환차손으로 인한 수출 장애

요인이 속출하자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가 이에 대

한 대책 마련을 위해 '환위험관리 설명회'를 전국을 대상으로 순회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환율변동 현황과 전망, 환관리기법과 사례 소개, 환변동보험과 사례소개 등으로 진행했다. 이와 관련 무역투자실장은 '중소기업 환차손 방지를 위해 올해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 인수규모를 작년보다 38%증가한 4조원으로 확대한다"며 "환율이 수출에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련부처와 협력, 환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트라와 산업연구원 공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시장별, 품목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품목별 영향 및 대응방향

자료출처 : 산업연구원

품 목	영 향	대 응 방 향
반도체	수출가격 인하 등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일본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가능성 등 장기적 영향 우려	신규투자 확대 및 수출개선 등으로 경쟁력 우위 유지노력 필요
자동차	제3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약화 및 수입차 시장에서 일제차 비중 확대 예상	단기적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해외생산 비중 확대 등 추진
철 강	일본의 저가 수출확대로 중국등 아시아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잠식 우려	장기적으로 채산성 약화가 우려되므로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노력 필요
석유화학	중국시장 등에서 합성수지 등 대일 경합제품 가격경쟁력 약화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원가 절감 및 물류 비용 경감
기 계	경합품목 적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나 건설기계, 금형, 섬유기계 등 다소 영향	품질경쟁력 향상, 수출시장 다변화, 해외 현지투자 확대 등 추진
조 선	대일 가격경쟁력 약화로 범용선, LNG선 등의 수주에 악영향 예상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노력과 함께 고부가가치선의 핵심 기술 확보 및 정보화 추진

산업자원부, 윤리 경영 수준 평가제도 도입

올 하반기부터 기업들의 윤리경영 수준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우수기업을 시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업들의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표준안이 만들어지고 전문인력 양성과정도 개설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윤리경영 강화방

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산업정책연구원 등 중립적인 연구기관들이 대기업 50~100개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성과를 평가, 순위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부터 경제단체 시민단체(NGO)등의 공동주관으로 '기업시민 대상'을 도입해 윤리경영 우수기업을 시상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내년 말까지 30대 그룹과 선도적인 중견 중소기업에 윤리경영체제를 정착시키고, 2004년까지는 매출 기준 500대 기업에 윤리경영

체제를 확대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500대 기업 중 45.2%가 윤리헌장을 갖고 있으나 실천 시스템까지 갖춘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경영체제 활성화될 전망

중소기업의 정보화경영체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경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제2회 중소기업 정보경영화 포럼'을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2년간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화경영체제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정보기술과 정보화 마인드 향상, 사무비용 절감, 생산기간 단축 등의 종합경영효율이 30%

제고됐다고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부터 정보화 경영체제 소요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해 매년 300개 업체의 정보화 경영체제 확립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정보화 경영 우수업체인 대륙전자(주), 대원전기(주) 등 30개 업체를 선정해 '정보화경영체제 인증평가증서'를 수여했다.

산기반 사전연구제 도입

올해부터 산업기술기반조성 신규사업선정절차에 사전연구기획절차, 기술개발과제와 연계된 과제의 우선지원제도 등이 도입되고 사업비 관리시스템이 개선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사전연구기획을 통해 관련업계의 수요, 참여의지, 청부지원 종료시 자립화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후에 추진할 수 있다. 또 사전연구기획 과제중 우수과제를 선정해 최종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수요조사시 제안된 310개 과제 중 전문가 평가등을 거쳐 연구기획 대상과제로 선정된 SOC 설계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등 35개 과제에 대해 연구기획이 실시된다. 산자부는 개정안에서 기술개발 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의 연계를 강화시켜 기술개발사업과 연계된 사업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양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는 앞으로 증기거점 및 차세대 사업으로 지

원하는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이나 사업화에 필요

한 기술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KS규격, 국제규격 (IEC)수준 이상으로 개정

무정전 전원장치를(UPS)를 비롯한 냉장고, 에어컨 등 23개 전기제품의 KS규격이 3월부터 국제 규격수준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완제품에 사용되는 접속기, 변압기 등 핵심부품도 개별시험을 받아야 한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다국적 기업의 내수시장확대 및 국가간 기술무역 장벽해소를 위해 현재 마크를 표시할 수 있는 UPS, 에어컨, 냉장고, 청소기 등 전기기기 23개 품목에 대해 KS규격을 국제규격(IEC)수준 이상으로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의 일환으로 지난 연말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전기납땜인두, 전기토스터 등 5개 규격에 대해 국제규격 수준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제품의 외곽재료가 불에 타지 않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토록 하여 화재시 다른 물질에 인화되지 않도록 했으며 완제품에 사용되는 콘덴서, 접속기, 변압기 등 모든 핵심부품에 대해서도 개별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또 제품의 고장 발생을 줄이고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등 품질수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기술표준원은 기존 KS업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규격에 의해 적합한 상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재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가정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전기제품의 생산원가가 상승해 KS업체들이 당분간 다소 부담을 느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수용과 수출용을 별도로 설계하지 않고 생산함에 따라 수출 증대효과 및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고품질 제품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UPS·개폐기·차단기·변성기 제품신뢰성 평가인증품목 지정

정부는 UPS·진공차단기·개폐기·건식변성기 등 4개 품목에 대한 제품 신뢰성평가인증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실시한다. 지난해 5월 발전기·차단기·개폐기 등 주요 중전기 제품에 대한 신뢰성평가인증사업을

처음 실시한 기술표준원은 올해 전기부품·소재의 대회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신뢰성평가 사업은 세계일류제품을 육성·발전시키

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두고 제품의 안전성 및 제조업체의 위험분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기 차단기의 제품신뢰성을 평가하고 있는 전기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시행초기에는 일반 업체들이 정부의 취지를 잘 몰라 신뢰성 평가 의뢰를 해오는 업체가 적었지만 지난 연말부터 의뢰를 요청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형편”이라며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정부의 부품소

재 지원시책이 본격화되는 올해에는 중전기 전문업체들의 신뢰성 평가 도입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신뢰성평가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기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신뢰성 평가센터를 국가품질신뢰성센터로 격상시키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160여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일류 부품소재로 육성할 방침이다.

ERP도입 중소기업 인센티브 검토

ERP를 도입한 중소기업에게 일정부분의 인센티브가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ERP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감면을 종전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3%를 감면키로 했다. 또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ERP등 정보화 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손금 산입을 인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세 부담에 대한 경감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업계에서는 성공적인 ‘3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사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

를 높이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업계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IT화를 유도하기 위해 “ERP 도입 시 투명경영이 확보되는 만큼 ERP 구축 당해 연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세액 공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조달물자,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은 “부서간 혹은 타부처와의 논의도 있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연내에 ERP를 구축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대상 제조물책임 지원 강화

중소기업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조물책임

(PL)대응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중기청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PL인지도제고에 주력했으나,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PL 추진능력 배양, 실질적인 PL대책추진 확산, PL분쟁의 해소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 3자의 생명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 판매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중기청은 먼저 PL전문가 양성교육 또는 PL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3천개사를 대상으로 4박5일 과정의 PL전문가 양성교육 과

정을 신설해 수강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전제품, 화학제품 등에 대한 PL대응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동일 유사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체 PL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중기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민간주도의 PL분쟁조정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PL일반보험보다 20~30% 저렴한 PL단체 보험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같은 PL지원사업을 추진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소비생활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벤처기업 요건 대폭 강화

앞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이 5~6년으로 제한되는 등 벤처 졸업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 벤처기업 지정요건(벤처캐피탈이 10%의 자금을 투자하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이 5%를 상회하는 것)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확인·평가·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종합대책'을 마련, 이같은 여론 수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벤처기업 지정 재확인 과정'도 대폭 강화해 기술개발 실적이 부진하거나 대표자가 경제관련 사기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벤처기업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

는 방안으로는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소득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자금을 대출할 때 금리를 시중금리보다 2%포인트 낮게 하는 것을 최장 6년 이내로 제한하며 2년마다 벤처기업에 대한 시태조사를 벌여 기술개발 실적이 없는 이른바 '무늬만 벤처'인 기업을 숙아내고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부 출자를 25~50%에서 30% 이내로 제한하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차입보다는 자기자본으로 이뤄지도록 벤처캐피탈의 부채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프라 구축·신기술 사업 등 4대 부문 확정



국내 조명계의 기술력, 경쟁력 확보 등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 디지털 전자산업과는 “2002년 조명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열악한 국내 조명업계의 활성화와 국내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나섰다.

조명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신기술 개발,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촉진, 관련제도·규격 및 인증제도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업 계획안을 중심으로 본지에서는 조명계를 진단해 본다.

▲ ‘조명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구축’으로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5차년도 사업개요로 실시된 조명 기술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올 11월까지 마무리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품질평가·시험검사 설비 16종을 확보하고 조명기술관련 DB를 15만건 확보 예정으로 조명정보 지원센터기능을 보강한다. 또 205항목이상 시험검사 항목을 늘려 공인 시험기관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인프라구축과 관련 산자부는 조명업계의 현안 및 조명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조명산업발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 총회를 개최해 각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 총회를 개최해 각 분과위원회 및 총회의 정기화를 추진시킬 방침이다.

▲ ‘조명분야신기술 개발사업’은 오는 2004년까지 총 100억원(정부 50억원, 민간 50억원)을 마련해 조명 기술연구소, LG전자, 태원전기산업과 함께 ‘초고주파 방전 신광원시스템 개발사업’에 돌입한다.

초고주파 방전 신광원시스템 사업은 초고주파 무전극·비형광 점광원 및 전원장치, 점광원 광전송 시스템 디자인 기술, 신광원 관련 응용 기술 및 평가 기술, 표준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획기적인 조명전력 절감(20%)과 함께 수출전략 산업화로 수출증대 및 조명산업 친환경화를 달성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산자부는 또 조명 신기술 개발사업으로 올 하반기 11월부터는 에너지 절약 중대형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은 오는 2006년까지 50억원을 지원해 RF파를 이용한 무전극 형광등 시스템을 개발하고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정책과 연계한 조명산업의 에너지절약형 사업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조명정책의 향후 방향을 추진하고 조명기술 로드맵을 작성해(12월중) 국내 조명산업의 기술현안, 기술수요 및 세부분야 기술개발 경로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외 산자부는 ‘에너지절약 정책에 부합하는 고효율 조명기기 상용의 촉진’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개정 및 수요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을 확대 추진하



정책 동향

기 위해 고효율 조명기기 설계의무화를 확대 개정한다

▲ '조명관련 각종제도 규격 및 인증제도를 일원화하고 IEC등 국제 규격에 맞는 조명규격마련과 제조물 책임(PL)법에 대비해 조명업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 현재 국내 중소 조명시장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은 "벼랑 끝에서 한줌의 풀뿌리(단체수의계

약)에 매달린 듯 기술력 경쟁력 상실로 인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300여개의 국책과제 중 단 4개의 사안만이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실히 수행해나가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꾸준히 육성한다면 올 2002년 조명계는 기술력과 경쟁력에서 다시 한번 거듭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